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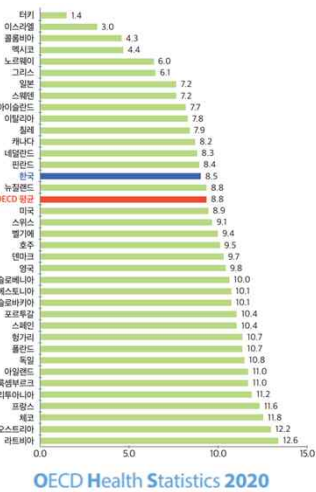
책임 있는 음주 문화를 위한 캐나다와 한국의 음주 제한 정책 비교

백명주*, 고광욱**, 김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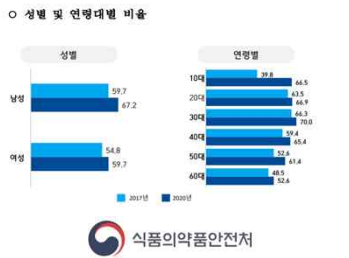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연구배경

2020년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5리터로 OECD 평균(8.8리터) 보다 적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우리 국민의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회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 위험 음주 경험 비율은 증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음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적 뒷받침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음주제한정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 고위험 음주량: 순수 알코올 양으로 남자 60g, 여자 40g 이상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 8.8잔, 여자 5.9잔에 해당)



연구목적

국내 절주사업은 개인이 절주를 실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둔 정책이 아니다. 다행히 국회는 2020년 12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음주 제한 정책을 살펴보고, 공공장소의 음주 제한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음주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로 국내외의 관련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구글과 구글 scholar에서의 검색어는 알코올 정책, 음주문화, 음주정책이고, 국외 검색어는 alcohol policy in canada, alcohol prices in canada 등으로 검색하였다. 국내 정책은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검색하였다.

연구결론 및 제언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판매 장소와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 캐나다처럼 판매 장소와 시간을 제한해서 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을 편다면, 금주에 대한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둘째, 다행히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캐나다처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한다면, 음주피해를 예방, 감소하는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셋째, 2020년부터 종량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전환하였으나 일부 주종만 해당된다. 캐나다와 같은 최저 가격제의 도입과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과세 전환하면 알코올 소비를 제어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 제한 정책에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향후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구결과

<표 1> 캐나다와 한국의 음주 문화 비교

캐나다	한국
음주문화가 엄격하다.	음주문화가 관대하다.
가족, 친구끼리 가볍게 마신다.	공동체 규함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구입이 어렵다.	구입이 쉽다.
만 18~19세가 되면 구매 가능.	만 19세 이상 구입

<표 2> WHO의 SAFER에 따른 캐나다와 한국의 음주 제한 정책 비교

캐나다	한국
주류의 이용 가능성 제한 강화	
판매 허용시간이 있음	24시간 판매
허가받은 주점 및 전문점에서 판매 가능	편의점, 술집, 마트 등 판매 가능
공공장소에서 음주는 불법	2020년 12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주구역 지정 근거 마련



Strengthen restrictions on alcohol availability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와 단속	
음주운전 측정 거부 권리 없음. 월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 민간에서는 주류 업체를 필두로 광범위한 예방활동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됨
차량 내 개봉한 술병 있을 경우 '음주운전미수법' 적용.	법규 없음



Advance and enforce driving counter measures

음주 문제 선별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촉진	
위험에 처한 음주자를 선별, 검사, 단기 개입 및 SBIR 예방에 도움.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 민간에서는 주류 업체를 필두로 광범위한 예방활동	조기 발견 및 개입 정책을 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1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치료는 입원과 통원 프로그램 다원화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9개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이 있음.



Facilitate access to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and treatment

주류광고, 후원 판촉 금지 혹은 종합적 규제 시행	
주류 마케팅 및 광고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규제	2021년 6월 30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되어 주류광고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Enforce bans or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alcohol advertising, sponsorship, and promotion

세금 및 가격정책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	
알코올 가격이 높다. "사회적 연대 책임"이라 하여 연방 및 주정부가 주류에 대한 최저가격과 세금을 규제	2020년부터 종량세로 과세 전환하였으나 맥주, 탁주에 대한 일부 주종만 해당.



Raise prices on alcohol through excise taxes and pricing policies